

연구논단

최근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의 동향과 전망/72

김용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적과의 동침' 혹은 '적과의 협상'/81

김재한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독일 통일 과정과 동독 사회의 변화/95

윤도현 한양대 강사, 사회학 박사

북일 수교와 경험 전망/104

이종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최근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의 동향과 전망

김용호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후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에서 서방 세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 기업의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 및 교역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수재 지원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원조, 투자,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수로 공급 협상이 타결되고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시기에 맞추어 북일 수교 회담이 타결되어 대북 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수재 및 식량 지원 문제와 남북 경협 확대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I. 서론

북한의 장래를 전망하려면 반드시 북한의 내부 경제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식량난과 수재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대외 경제 개방의 실험이 성공하는 경우 김정일 정권과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장래는 매우 밝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장기간에 걸친 식량난과 굶년의 대규모 수해를

부각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김정일 정권은 물론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물론 북한의 경제난 심화가 바로 김정일 정권이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으나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경우 북한 지도층의 분열, 민심 이반, 주민 소요, 난민 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동부 공산 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북한 정권과 체제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그런데 북한이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경제난을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구소련과 동구 공산 정권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개방과 개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대외 개방 없이 기존의 중앙 집권식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을 달성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북한 경제의 회생 여부를 전망하려면 대외 경제 정책의 향방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결국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대외 무역과 외자 유치 등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경제 개방과 개혁이 가져 올 사상적 오염과 주민 통제 및 사회주의 체제 관리에 주는 부담으로 인해 그 동안 본격적인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비록 북한 당국이 1991년 나진 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그 동안 20여개의 외자 유치관련 법안을 제정하였으나 경제 개혁 없는 부분적인 개방만을 추구한 결과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에 북한 당국이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 경제 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북한 당국은 아직 획기적인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미, 대일 관계 개선 등 실용주의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 보상 체계'를 요구하는 등 정치 군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게 쌀 지원을 요청한 후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경제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외 무역과 외자 유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정책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글은 북미 세네바 핵합의 후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의 실상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내려보기 위해 작성하였다.

II. 최근 대외 경제 활동의 주요 특징

1. 식량난과 수재 극복을 위한 원조 도입 정책

북한 당국이 내부의 취약성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인접 국가와 국제 사회에 식량난과 수재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배경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경제 원조 중단 또는 대폭 감소, 식량난 누적, 농업 생

산력의 저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수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의 식량 원조 및 구입 현황을 알아보면, 북한은 1990년 이래 매년 약 2백만 톤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연간 1백만 톤의 식량을 원조 내지 우호 가격 등으로 공급 받아왔으나 작년에 중국 남부 지역의 대규모 홍수 등으로 인하여 24만 톤밖에 도입하지 못하였고 전년 1/4분기에도 1만2천톤밖에 수입하지 못한 결과 한국, 일본 등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이 1차로 15만 톤을 부상 지원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 지원을 위한 남북한 회담이 2차례 열렸으나 남북된 우성호 선원 송환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부정의한 태도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은 1차로 30만 톤(무상 15만 톤, 유상 15만 톤)을 지원한 후 지난 9월 30일에 북경에서 개최된 실무 접촉에서 20만 톤의 쌀을 유상으로 추가 지원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8월에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해 10만 톤의 양곡을 긴급히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이 금년에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확보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중·일로부터 75만 톤의 식량 원조를 받은 것 외에 1995년 3월 미국 바틀렛사로부터 옥수수 5만4천 톤을 구입하였고, 또한 1995년 2월 태국으로부터 30만 톤의 쌀(35% 절미) 구매 계약에 합의한 결과 최근까

지 총110만 톤의 곡물을 해외에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해 복구를 위한 북한 당국의 외부 원조 획득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료품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 수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연간 곡물 수요량은 7백63만 톤인데, 이번 수해로 인한 곡물 피해가 1백90만 톤에 달하고 작년도 생산 부족분이 1백97만 톤이어서 모두 3백87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¹⁾ 북한이 금년에 한국, 일본, 태국, 중국, 미국 등으로부터 총 110만 톤의 곡물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족분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약 2백77만 톤을 해외에서 원조를 얻거나 구매해야 할 상황이다.

유엔조사단은 가옥 유실, 또는 침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 50만명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식량, 의류, 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 1차로 총 1천5백71만 달러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각국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 국제 기구가 자체 기금으로 약 74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직접 또는 유엔을 통해 약 1천23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국제 적십자연맹 등 민간 구호·종교 단체와 해외 교민이 약 1천59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인 바, 총 지원 규모가 약 2천1백50만달러로 추정된다.

1) 북한 당국이 유엔조사단에 제공한 통계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가 자체적으로 5만 달러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2.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외자 도입 정책

북한 당국은 1984년부터 합영 사업을 추진했으나 조총련의 투자 외에는 성과가 미비하여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후 외국인투자법, 토지임대법, 외화관리법 등 20여개 외자 도입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북한 당국자가 독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홍콩, 태국, 대만 등지에서 나진·선봉지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외국 기업 및 해외 교포의 투자는 아직 부진한 상태이다. 외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 논의는 총 170여 건이었으나 실제 체결된 투자 계약액은 1억5천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액은 4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이 5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로 경공업,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조총련계 사업이 9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아직 서방 기업의 본격적인 대북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네바 합의 후 외국 기업의 방북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홍콩, 네델란드, 독일, 러시아, 중국, 대만 등 8개국, 1백50여개 업체가 북한을

방문하여 50여 건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교환하였으나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10 건 미만이다. 현재 실행된 것은 AT&T사의 미·북 직통 전화 개통, 중국 기업의 나진 원정리 도로 공사, 사리원 농기계 부품회사, 러시아 기업의 나진항 비료중개장, 미국 교포의 나진호텔 건설 등이다.

그리고 제네바 핵합의 후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에 단행한 '대북 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한국의 10개 업체 50여명이 평양·남포 지역(7개업체)과 나진·선봉 지역(3개 업체)을 방문하여 총 22건의 대북 투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성사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즉 대우그룹이 남포 공단내 정공업 공장에 5백12만 달러의 투자 승인을 받은 것과 한국특수선이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나진-부산간의 직항로 개설에 합의한 것 외에는 아직 성사된 것이 없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외자 유치와 대외 무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존의 조직을 여러차례 재정비하였다. 1992년 12월 기존의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 대외경제위원회를 '대외경제위원회'로 통합한 데 이어 최근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성대) 산하의 '조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우)와 '조선 국제무역촉진위원회'(위원장 이성록)가 각각 투자 유치 업무와 무역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구 정비의 배경은 대외 경제 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구간의 업무 중복이나 지나친

경쟁, 대외 활동의 혼선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UNDP가 주관하는 다자간 개발계획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북한은 UNDP 주관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소극적이었으나 UNDP가 개발 방식을 마스터 플랜에 따른 공동 개발에서 국가별·단계적 개발로 전환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TRADP 5차 계획관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5개국(한국,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위원회와 유역 3개국(북한, 중국, 러시아) 위원회 설립 협정 및 환경 원칙에 관한 양해 각서에 가서명하였으며 특히 나진항 개발을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택한 바 있다.

3.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중유와 경수로 도입 정책

북한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다. 북한은 과거 소련으로부터 매년 50만 톤에서 2백만 톤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였으나, 1991년 이후 거의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심각한 원유난을 겪고 있는 바,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에서 기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3개월 이내에 5만 톤, 1995년 10

월까지 10만 톤, 1996년부터 경수로가 완공되는 오는 2003년까지 매년 50만 톤씩의 중유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금년 1월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 후 KEDO가 금년 10월 21일까지 10만 톤을 3차례에 나누어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경수로 도입과 관련하여 금년 6월 북미 간의 팔라뮴푸르 경수로 협상의 합의에 따라 북한 당국과 KEDO간에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조기 타결을 서두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KEDO 팀의 경수로 부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이 금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년 9월과 10월에 팔라뮴푸르와 뉴욕에서 개최된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전문가 회담에서 북한은 경수로 외에 도로, 송·배전 시설, 항만 시설, 시뮬레이터 등 약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부대 시설을 경수로 공급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경수로 공급 범위, 상환 조건 등과 관련하여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북한은 미국의 양보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외화 획득을 위한 무역정책

사회주의 무역권의 붕괴로 북한은 서방의 무

역 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바, 북한 당국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외 경제관계의 방향 전환'을 3대 기본 방침의 하나로 추진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수출 상품 개발 부진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과거 사회주의권과 우호 가격에 의한 청산거래 위주로 구상무역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국제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에 따라 대외 무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993년 12월 당중앙위 전체회의가 '무역 제일주의'를 채택한 데 이어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에서 대외 무역의 발전을 강조하고 시장 개척, 신용 확립, 수출품 생산기지 확충, 품질 제고, 가공 무역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후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만성적인 대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1988년에 사상 최고치인 52억 달러를 기록한 후 계속 하강 추세에 있는 바, 1994년 대외 무역 총액은 21억1천만 달러로 전년도의 26억4천만 달러에 비해 20% 감소하였으며 199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 6.1%가 감소한 9억3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또한 1995년 상반기 중 수입이 늘어났으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여 무역 수지가 전년 동기보

다 더욱 악화되었다.

국가별 무역 현황을 보면 북한은 아직도 중국, 일본 등 2개국에 무역 총액의 50% 이상이 편중되어 있어 무역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전반기에 북한은 전통적인 주요 교역 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이 감소하고 일본, 한국 등 서방 교역 상대국들과의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상품은 주로 광산물 등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독일, 한국 등과 섬유 등 경공업 분야의 위탁 가공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 위탁 가공 교역은 1991년 3만 달러, 1992년 96만 달러, 1993년 7백99만 달러, 1994년 2천8백56만 달러, 금년 8월까지 2천9백62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남북한 교역은 여전히 간접 교역이 대부분으로 1992년 이래 연평균 1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94년의 경우 남한이 중국, 일본 다음으로 북한의 3대 교역국이 되었다. 남한의 반입이 90% 이상을 상회하여 북한의 대남 흑자는 1억6천만 달러로 대일 교역 흑자 1억5천만 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북한의 중요한 경화 획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1995년 전반기 남북한 교역은 1억6천만 달러로 작년의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대북 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남북 교역을 통해 물자 품귀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Ⅲ.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 개혁이 필수적

북한의 수해 피해와 식량 부족이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북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미국, 일본 등 국제 사회의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접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북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 중국과 일본은 북한의 붕괴나 한반도의 불안정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대북 지원에 비교적 적극적이며 특히 일본은 대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3백7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물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50만 톤의 쌀 외에 수해 복구를 위해 5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대북 수재 원조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식량난, 자재난, 전력난 등으로 인해 수재 복구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금년 겨울의 주위와 내년 봄의 춘궁기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량 사정이 나아질 전망은 별로 없다. 북한은 올해 총 110만 톤의 식량을 해외에서 확보하여 부족분 190만 톤의 질반 이상을 보충할 수 있었으나 수재로 인해 1백97만 톤의 곡물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내년 추수기까지 약

277만 톤의 곡물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곡물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한·중·일, 태국, 미국, 베트남, 호주 등인데 과거 북한의 최대 식량 지원국인 중국의 대북 지원 감소, 태국의 흉수 피해, 남북 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도입 정책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게 장기간 식량 원조를 제공할 나라는 없기 때문에 외국의 식량 원조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집단농장의 점진적인 해체, 병충해 방지 농약의 개발, 비료 증산, 산의 나무를 베고 만든 계단식 논밭에 조립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산사태 방지와 수리 시설의 확보 등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주민 통제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집단농장의 해체와 가족농의 도입 등 농업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농업에 있어서 전인민적 소유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협동농장 소유를 국영농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농업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외자와 에너지 자원 도입 정책의 문제점

북한의 외자 도입 정책이 성공하려면 점진적인 경제 개혁의 추진 등 투자 환경의 개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채무

불이행 해결을 통한 대외 신용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나진·선봉 지대 개발에 있어서 노무 관리 등 제도의 개선과 중화학 공업 위주보다 경공업 위주의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는 등 정책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외국 기업의 본격적인 대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북한의 에너지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KEDO의 중유 공급량이 북한의 원유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경수로 협상의 타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재로 인해 일부 발전소 시설이 유실되어 북한의 에너지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경수로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무역 제일주의' 정책의 한계

북한은 사회주의 무역권의 붕괴 후 '무역제일주의'의 채택과 무역 분권화 등 '신무역체계'를 수립하여 대외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랜 사회주의 방식의 무역 관행으로 인해 아직 자본주의 무역 방식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후 북한의 대외 무역 총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줄어들고 일본, 한국, 독일

등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즉 작년에 한국이 북한의 3번째 최대 교역국이 되었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 남북한 교역이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로 증가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후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에서 서방 세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 중유와 경수로 등 일부 에너지 자원을 서방에 의존하게 되었고, 식량과 수재 지원을 서방 세계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대외 교역에서 서방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대외 경제 관계가 종래의 사회주의 경제권 위주에서 서방 세계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바, 서방의 대북 식량난과 수해 지원과 함께 서방 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성, 대외 경제 정책의 한계, 대미, 대일 등 대외 관계 개선의 미진, 남북한 관계 개선의 부진 등으로 인해 서방의 대북 지원과 투자 및 교역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대외 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올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과 수재 지원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원조·투자·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단기적으로 수해로 인해 더욱 감소될 것이며 특히 대외 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남북한 교역의 중요성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수로 공급 협상이 타결되고 미-북간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시기에 일-북한 수교 회담이 타결되어 대북 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에너지를 탈기 위해 경수로 공급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외자 유치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북한간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바, 북한이 일본의 배상금을 확보하여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대일 수교 협상을 조기에 타결지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북 수재 및 식량 지원 문제에 있어서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제공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대남 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정부는 당분간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주변 국가의 대북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북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 채널을 손상시키는 추가 요구나 강경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재 복구 원조나 식량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유연성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 교역 및 경협 확대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한 기업에 대한 접촉만을 활발히 추진하고, 당국자간의 경협 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에 협조하는 한편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남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우리 기업인과 기술자의 방북, 북한 내 민간기업사무소 설치, 위탁 가공 무역의 활성화, 소규모 투자 등의 허용)가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이나 조치보다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2**